내일 한·일·중, 22일 한·미… 文 대통령 '릴레이 외교전'

현직 대통령 6년반 만의 日 방문

22일 워싱턴서 트럼프와 회담

비핵화·평화 정착 '훈수' 둘 듯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청와대에서 도서·벽지 지역과 접경 지역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초청,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후속 외교전을 이번주 본격화한다.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 직후 주변국 정상들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하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 가운데 오는 9일엔 일본 도쿄를 방문해 한·일·중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면서다.

이달 22일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도 계획하고 있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9일로 예정된 한·일·중 정상회담에선 3국간 실질 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특히 이와 별도로 3국 정상은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는 특별성명도 채택할 전망이다.

중국에선 시진핑 국가 주석 대신 리커창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에 참석한다.

3국이 채택할 특별성명에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 일본과 중국이 지지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다만 성명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표현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이에 대해 확인했다. 앞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안을 중국과 일본 두 나라에 회람도 시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성명은 우리가 요청한 것으로 판문점선언을 지지해달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특별성명에 판문점선언 지지 내용을 담으면서도 비핵화의 핵심 사안인 CVID 표현을 넣지 않기로 한 것은 북미 양자가 다룰 비핵화 사안에 제3국이 개입할 경우 북미 간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담은 7번째로 정치·외교적 사안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체육 등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인적·문화·스포츠 교류 확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 공동대응 ▲3국간 LNG 도입 관련 협력 ▲캠퍼스 아시아 사업 등 교류 증진 ▲휴대전화 로밍요금 인하 협력 ▲2020년 도쿄올림픽·2022년 북경올림픽 등 교류 활성화 ▲동아시아 지역 협력 강화 방안 ▲개발·사이버안보·테러 등 협력 등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6년 반만에 일본을 찾는 가운데 짧은 방일 기간 동안 한·일·중 정상회담과 함께 한일정상회담도 별도로 갖는다. 이번 회담까지 포함하면 문 대통령은 취임 1년 동안 아베 총리와는 총 6차례 회담을 갖게 된다. 그동안 전화로도 12차례 통화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문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이번 방일은 한일 관계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이뤄지는 만큼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22일엔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다.

이는 5월 말 또는 6월 초 있을 북미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으로 이미 김 위원장을 만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훈수'를 두기 위해서다.

형식적으론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자마자 이에 앞서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했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 장소가 판문점이 될 경우 '분단의 상징'인 역사적 장소에서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의 정상이 만날 그림까지 그리기도 했었다.

몽골, 싱가포르 등으로 관측되던 북미정상회담 장소는 싱가포르로 압축되고 있는 분위기이지만 미국과 북한이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난주 미국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고 귀국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미회담 시기와 장소는 미국과 북한이 결정하면 우리 정부는 존중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 및 날짜와 관련해서 "시간과 장소 결정을 모두 마쳤다. 우리는 날짜를 갖고 있다.(회담 결과와 관련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자"고 말했다.

이처럼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와 날짜가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돼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시곗바늘이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 27일 역사적 만남을 가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서울 청와대와 평양 국무위원회에 각각 '핫라인'을 개통해 놓은 뒤 정상간 통화는 미뤄놓고 있는 상태다.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올 경우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핫라인을 통해 보다 진전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美 전략자산 전개 비용 韓에 떠넘길까

외교부, 내주 韓美 방위비분담 협상

구체적 액수 놓고 밀당 본격화 할 듯

4월11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 시작 전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왼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은 다음주 중 미국에서 2019년 이후분 방위비분담 협상 제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내주 회의를 개최하기로 가닥을 잡고 세부 일정과 장소 등을 조율하고 있다. 장소는 워싱턴DC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수석대표로는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각각 나서며, 양국 외교·국방 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검토하라고 명령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계기로 주한미군 문제가 불거진 터라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의 태도가 주목된다.

미국 정부는 NYT보도를 부인했지만, 해외주둔 미군의 주둔 비용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비춰 주한미군 감축이 한국의 방위비분담액 증액을 관철하기 위한 '최후의 압박 카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미군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라는 미측 압박이 강화할지 주목된다.

앞서 미측은 지난 3~4월 열린 1·2차 회의 때 미군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것을 요구했고, 우리 측은 전략자산 전개비용이 방위비 분담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점을 들어 난색을 보인 바 있다.

전략자산 전개비용이 포함된 미국 측의 요구액이 올해 우리 측 분담액수인 9602억원의 1.5~2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번 협의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둘러싼 밀고 당기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양측은 이미 분담 규모와 관련한 입장을 담은 문안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기에 2019년 이후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 /연합뉴스

5월 국회정상화도 요원… 추경 또 계류

역대 최장 지연… 기간 한달 넘겨

정부가 3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계류 기간이 7일로 한 달을 넘겼다.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정국 경색 속에 논의 한번 되지 않은 채 겉돌고만 있다.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첨예해지면서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5월 들어서도 드루킹 사건 특검과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문제 등을 놓고 여야의 기 싸움이 이어지며 국회 정상화 가능성을 점치기 쉽지 않다.

장기간 국회 파행의 여파로 추경은 관련 상임위원회 10곳에 지난달 6일 회부는 됐으나 아직 한 곳에서도 상정되지 않았다.

상임위 회부에서 상정일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번 추경은 역대 최장 지연 처리가 이뤄졌던 지난해(회부로부터 28일째 상정) 기록을 넘어섰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은 국가재정법 요건과 공무원 증원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한 끝에 국회 통과까지 45일이 걸렸다.

한 달 넘게 처리되지 못한 올해 추경의 계류 기간은 작년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설사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더라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극복과 구조조정에 따른 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인 만큼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돈 풀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야 대치가 풀리지 않아 5월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6·13 지방선거와 그에 이어지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등 변수 탓에 최장 처리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도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첫 추경안은 여야 공방 속 원 구성이 지연돼 국회 제출부터 상임위 상정까지 두 달 넘게 걸린 적이 있다.

당시 여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불거진 '쇠고기 파동' 여파 등으로 치열한 대립을 이어갔고, 결국 추경 통과까지 90일이 걸렸다.

2000년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편성된 추경은 국회 제출에서 처리까지 106일이나 걸려 최장 기록으로 남아 있다. /연합뉴스

韓-中, 국방실무회의… 中군용기 KADIZ침범 방지 요구

사드 갈등 중단 2년4개월만

한중 양국이 7일 서울에서 제16차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1995년 처음 개최된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는 2016년 1월 열린 이후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등으로 인한 갈등 탓에 중단됐다가 2년 4개월 만에 재개됐다.

이번 회의에 우리 측에서 여석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중국 측에서 후창밍(육군소장) 국방부 국제군사협력판공실 주임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국방부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측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달 27일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한반도 안보정세에 관해 설명했다"면서 "양측은 올해 국방교류협력 계획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측은 사드 갈등 이후 중단된 군 고위급 인사교류를 예년 수준으로 복원하자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급 인사교류에는 양국 국방장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제시한 국방교류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 이번 회담에서 우리 측은 지난달 28일 중국 군용기 1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들어와 포항 동남방에서 울릉도 쪽으로 비행한 행위를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Y-9로 추정된 중국 군용기는 KADIZ에 진입해 약 4시간가량 포항 동남방에서 울릉도 쪽으로 비행했다.

우리 정부는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와 두농이 주한 중국 국방무관(소장)을 불러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한 바 있다.

/연합뉴스